

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검토경과

- ☐ 발 의 자 : 김지만, 김혜정, 박갑상, 서호영, 이만규, 이영애,
임태상, 하병문 의원
- ☐ 발의일자 : 2019년 7월 5일
- ☐ 회부일자 : 2019년 7월 8일

2. 제안이유

- ☐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,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 조성과 대구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시장, 사업자, 시민의 책무(안 제3조~제5조)
- ☐ 종합계획 수립,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(안 제6조, 제7조)
- 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, 감축계획 및 실적 작성(안 제8조, 제9조)
- ☐ 탄소흡수원 확충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(안 제8조~제14조)
- ☐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조치(안 제15조~제17조)
- ☐ 기후변화연구센터 설치 및 국내외 협력 등 기후변화 대응 지원
(안 제18조~제20조)

4. 검토의견

☐ 제정취지

-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적극적·체계적 으로 대응하고,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
대구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.

☐ 적법성 여부

- 상위 법령과의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☐ 주요 검토사항

- 본 제정 조례안은 경제·사회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,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.
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

제1조에서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, 용어 정의, 시장·사업자·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,

제6조와 제7조에서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으며,

제8조와 제9조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, 감축계획 및 실적 작성 등을 규정하였음.

제10조에서 제14조까지는 산림사업, 신·재생에너지 보급 장려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해 규정하였고,

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, 조사체계 구축 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였으며,

제18조에서 제20조까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, 대구기후변화연구센터 설치·운영 등을 규정하였음.

□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*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, 국가 차원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에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.

* 현재 속도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산업화 이전(1850~1900년) 대비 2030년~2052년 1.5℃ 초과 상승, 2100년에는 3℃ 상승할 것으로 예상.

특히, 대구시의 경우 전기차 보급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, 지속적인 수목 식재 확대와 미래형자동차·물산업 육성, 스마트도시 구현 등 청정도시로의 변화를 추진중인 상황에서 주도적이고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시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.

- 본 조례안의 근거법률은 2010년 제정된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이나 기후변화 부문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 국회에 「기후변화대응법」(송옥주 의원 대표발의, 2017.7)이 발의되어 계류중인 상황이며

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, 광주 등 6개 시도*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조례를 별도 제정·시행 중에 있음.

* 서울(2008.9), 광주(2009.11), 인천(2010.1), 경북(2018.2), 경남(2019.2), 충북(2018.11)

- 현재 대구시에서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·시행,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운영, 도시숲 조성, 친환경차 보급,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등의 주요 시책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,

* 현재 대구시 기후변화 대응 주요 시책현황

사 업 명	비 고
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	1차(2011~2020)계획 시행중, 2차(~2030)계획 수립 중
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	대구시 56개 부서 및 사업소 178개 시설
탄소중립프로그램 운영	환경기초시설 태양광 설치
탄소포인트제/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	사용량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
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	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,컨설팅 지원 기후변화교육 센터 운영
도시숲 조성	미세먼지 차단숲, 바람길숲 조성 등
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	전기차(택시,버스) 보급, 승용차요일제,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
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	신재생(청정)에너지 보급 확대 고효율조명기기(LED) 교체 등

본 조례안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(제7조),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적응대책 수립(제15조), 기후변화영향 조사체계 구축(제16조), 기후변화 영향·취약성 평가 실시(제17조), 등을 추가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.

- 대구시에서는 상위법령 및 타 시도 현황을 참고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, 조사체계 구축 및 기후변화·영향 취약성 평가시 주요항목 및 절차 등에 대해 명확한 세부지침을 수립·실행하여 조례안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,

조례안 제19조에서 대구기후변화연구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, 타 시도 사례*분석 및 설치·지정의 장단점을 검토하되 관련 기관과의 중복여부와 협업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구센터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

* (재)한국기후변화연구원(강원도, 2008), (재)국제기후환경센터(광주시, 2013),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(충청남도, 2015),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(인천시, 2017)

- 또한, 본 조례안 제정 후 현재 「대구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」에 규정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근거 등 관련규정(제12조에서 제16조)의 정비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- 기후변화는 폭염, 호우, 가뭄 등 이상 기후현상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물 부족, 서식지 감소 등 생태계 파괴와 인간의 건강, 안보, 경제성장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구시에서는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

대구 특성에 맞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기후변화 대책 수립과 시행을 통해 대대적인 청정도시로의 전환과 시민들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,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존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-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